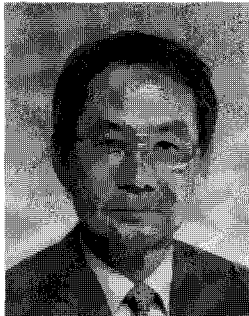


### 1. 개방화 시대의 양돈정책 흐름

개방화 시대의 양돈정책은 시장개방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전제로 경쟁력 제고에 큰 비중을 두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돈산업 수급안정과 발전대책의 흐름으로 1988년에 수출용 규격원료돈 확보, 1999년 수출규격돈 생산성 향상, 2000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한 사육기반 조성, 2001년에는 질병예



정찬길 교수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 개방화 시대의 양돈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방에 중점을 두고, 2002년에는 적정사육두수 유지와 친환경적 양돈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돼지고기 수출중단으로 공급과잉과 돼지의 가격 폭락이 반복되어 돼지고기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근본적으로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들을 입안하여 추진해 왔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1991년 이래 2001년까지 축발기금 4조6천원을 보조와 융자(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6.5%, 가축위생 및 방역 0.9%, 사료 및 기자재 육성 6.1%, 사육기반 확충 46.8%, 양축농가 경영력 향상 6.3%, 유통개선 23.8%,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8.2%, 축산폐수 처리대책 1.4%)로 투입하였으나 국제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고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종별,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었고, 실행을 위하여 막대한 축발기금을 투·융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2000년 3월, 2002년 5월 발생),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돼지고기의 수출이 완전 봉쇄되었다.

개방화 시대의 양돈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또한 수입은 계속 증가되어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파동으로 산업자체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 자급도는 계속 하락하여 양돈산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고품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환경부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돼지고기의 내부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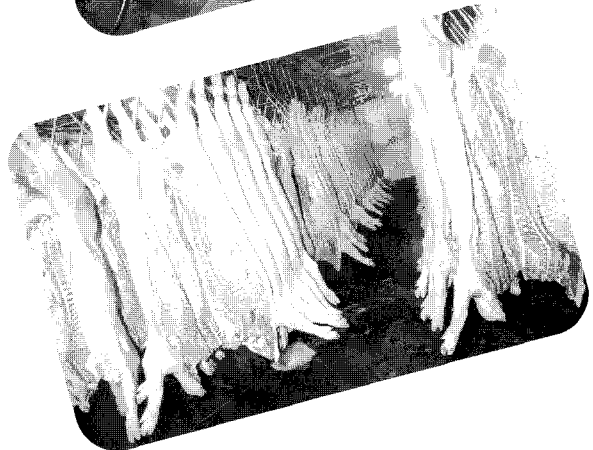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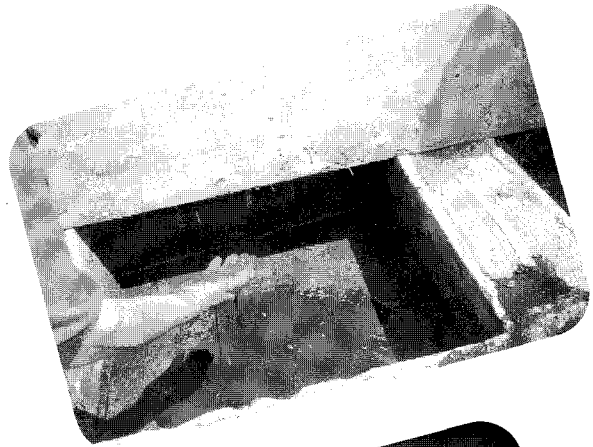
## 2. 양돈정책의 성과

전업규모 사육농가 증가로 규모의 경제성 및 수급의 안정성이 이뤄졌다. 1999년 9월에서 2001년 사이 전업규모(1,000두 이상) 사육농가 호수는 2.1천호에서 2.7천호, 전업규모 사육농가 두수는 4,353천두에서 5,830천두, 전업규모 사육두수 비율은 55.7%에서 66.9%로 각각 성장하였다.

단지조성 79개소, 계열화 17개소 등 양돈 사육기반을 조직화하여 돼지 사육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이룩하였고, 품질 및 가격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 즉, 단지는 79개소에 933천두(10.3% 점유), 계열 17개소에 1,111천두(12.3% 점유), 품질개선은 40개소에 1,923천두(27.1% 점유)로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양돈 수급안정 측면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돈수급안정위원회 구성, 수급안정자금 2001년 500억 배정).

또한 선호부위와 수출부위 수급균형을 위한 내수확대 및 수출의 적극적 추진으로 돈가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지역 등에서 돼지 408천두를 수매하고, 수



향후 양돈산업 정책의 방향은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사육부터 도축·가공·운송·판매 전 과정을 대상으로 위생 취약지점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등 총체적 품질경영관리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만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여야만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적자생존(適者生存)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규모 확대는 집단화 혹은 계열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하여야 한다. 양돈은 1,000~4,999두 규모가 최선의 적자생존 생산규모로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출부위인 안·등심 5,511톤을 수매·비축하였다.

수출이 중단된 돼지고기 수출업체에 대해 돼지고기 선도금(181억원) 지원과 기지원된 정책자금(710억원) 상환을 유예하였고, 정부수매 돈육 중 수출용 안심, 등심 부위의 군납과 돈육수출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입맛에 맞는 돼지고기 안심·등심 돈까스의 조리·가공법 보급 및 시식회를 통해 수출부위인 안·등심 소비홍보를 강화하였다.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을 전국 식육판매업자 중심으로 소매가격을 평균 17%(13~22%)인 하기로 결정(9. 26)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수행의 결과로 구제역 발생 전까지 농축산물 중 수출 선도 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림산물은 1993년에 1,045백만 달러에서 1998년에 1,635백만 달러로 156%가 증가하였는데, 돼지고기 수출액은 1993년 65백만 달러에서 1999년에 340백만 달러로 523%가 증가하였다.

또한 돼지고기 생산액은 1990년 11,738억원에서 1999년 26,869억원, 2000년에는 23,720억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 3. 양돈산업 정책의 향후 과제

향후 양돈산업 정책의 방향은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사육부터 도축·가공·운송·판매 전 과정을 대상으로 위생

취약지점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등 총체적 품질경영관리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만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여야만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적자생존(適者生存)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규모 확대는 집단화 혹은 계열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하여야 한다.

양돈은 1,000~4,999두 규모가 최선의 적자생존 생산규모로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단지화, 집단화, 전문화로 생산·가공·유통·분뇨처리 시설의 연대 이용체계 구축, 시설자동화를 갖춘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화, 생산자조직을 주축으로 사육·사료·생산·가공·판매를 연계하는 계열화 혹은 집단화 체제의 전개, 시설자동화 등 고정자본재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사육농가의 고령화·후계자의 부재·노동력의 부재 등 인력난 극복을 위한 인력양성과 노동의 전문화를 위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돼지고기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해 짐에 따라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수급안정기금이 조성되어야 하고, 비의탁 독립형·관리능력을 보유한 경영인 및 후계자를 육성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대응한 생산·유통을 전개하여야 하고, 컨설팅 체제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수출지향적 정책을 펼 경우 환경과 생산비에 큰 부담을 주므로 수출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수 위주의 양돈산업을 육성하고, 자급자족형 양돈산업으로 정착시키고, 돈육수출은 저수요 부위의 판로 확보에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한 소비확대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인적인 조직 측면에서는 계열·통합화를 통한 유통단계와 기구를 축소하고, 콜드체인화를 구축하여야 하며, 농협의 전국 소매기구를 권역별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생산·가공·보관·수송·하역·소매를 계열 통합하여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축산물의 재고관리와 수출입 종합컨설팅, 수출입 관련한 국제시장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논농사, 밭농사, 중산간지의 연계 복합경영으로 조사료를 조달할 뿐만 아니라 축산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함으로써 축산공해 및 민원제기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친환경 축산업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및 사후관리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를 중점 평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이를 빠른 시기에 보완하여야 한다.

더욱이 친환경 양돈산업의 추진 방향은 우리나라 국토의 유지와 자연 자원의 보존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유럽의 작은 나라들처럼 도시근교 집중화를 막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양돈산업을 운영하도록 하여 생산비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아닌 양돈농가의 환경 및 생태보호자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양돈**